

## “수도권 넘어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축 세울 터”

통합시장 후보에 듣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동부 신산업·서부 에너지·중부 농생명·광주 AI 육성 권역별 성과 순환체계 구축 ‘지역 균형발전’ 모델 방점 분산형 청사 운영...자치권 확대 ‘분권형 특별시’ 구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7월 출범을 앞두고 치러지는 6·3 지방선거의 막이 오르면서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40년 만에 하나가 되는 광주와 전남을 이끌 수장을 뽑는 터라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다. 각 후보들은 새롭게 탄생할 초광역 정부의 구상을 하나 둘씩 내놓으며 자신이 통합특별시를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행정통합에 따른 신산업 전략, 지역민의 생활 수준을 개선할 광역 교통망 계획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행정통합 후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정부가 행정통합 인센티브로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후보로 나서는 민형배 국회의원에겐 현재 구상 중인 전남광주특별시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폭넓은 공감. 그리고 시·도민 7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 여론이다. 저는 이제 개의 엔진을 하나로 묶어 강한 추진력을 만들어 낼 두 가지 강점이 있다. 바로 ‘국정 네트워크’와 ‘복합행정 능력’이다. 국정 네트워크의 핵심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정치적 신뢰 관계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16년 동안 정치적 동행을 이어온 진짜 원팀이다. 2022년 대선 캠프 전략본부장을 맡았고, 호남에서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다. 또한 당정청과 의정 활동을 두루 거치며 폭넓은 ‘복합행정 경험’을 쌓아왔다.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국회와 청와대에서 일하며 정책 수립과 입법부터 최종 실행까지 모두 경험한 경험은 통합 과정에서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초대 통합특별시장 경선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전남과 광주는 오랫동안 하나의 공동체였다가 잠시 갈라져 있었다. 그 갈라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분할 통치’를 시도했던 전두환 신군부가 강제로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렇게 만들어진 행정의 경계 위에서 우리는 예산을 놓고 경쟁하고, 사업을 놓고 갈등하며, 인재와 기회를 놓고 서로 소모해 왔다.

지금 우리는 그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전환의 기회를 맞았다. 수도권 중심의 구조를 넘어 전남과 광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는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 낼 역사적 기회다.

전두환 신군부가 갈라놓은 역사를 바로잡고, 전남광주 통합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번 경선에 나섰다.

초대 통합특별시장이 갖춰야 할 덕목은 결국 실력이다. 누가 통합을 실제 성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준비된 후보인지, 경선 과정에서 시민과 당원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전남·광주 통합은 지금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지금 광주는 재정자립도가 33.8%에 불과하고 지방채는 2조원에 육박한다. 전남은 22개 시·군 중 20곳이 인구소멸 위협지역이다. 전남과 광주가 힘을 합쳐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 속에서 지역의 활력은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지금 우리에게 통합을 추진할 세 개의 강력한 엔진이 있다.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통합 의지, 국회의원들의

-통합특별시의 미래 모습은.

△구상 중인 통합특별시는 단순히 행정 규모가 커진 도시가 아닌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는 도시다. 그 방향을 명확히 설계하기 위해 통합의 다섯 가지 원칙을 세웠다.

우선 성장통합이다. 전남의 에너지와 자원, 광주의 AI와 산업 역량을 결합해 AI·에너지 등 신산업이 연결된 거대한 일자리와 소득 생태계를 만들겠다. 농산어촌에도 새로운 산업과 관광, 서비스 기회가 확산되는 성장 구조도 구축하겠다.

둘째는 균형통합이다. 전남과 광주 어느 한쪽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산과 인사, 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농산어촌과 섬 지역에는 최소 보장과 우선 지원 원칙을 적용하겠다.

기본소득 원칙도 빼놓을 수 없다. 고용 불안과 소득 격차에 대응해 시민의 최소 소득을 보장하고,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만들겠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 전력을 기반으로 전남·광주를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하는 도시·농촌 도시 원칙과 시민주권통합 원칙을 통해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 구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주권이다. 시민이 통합의 내용을 채우고 시민이 통합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통합만이 지속 가능한 통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업을 유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전기’다.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를 실현하는 핵심 전략은 RE100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전력망’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수도권 넘어서는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축으로 세우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과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태양광 발전과 ESS 저장 전력, 기존 계통 전력을 결합해 전력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연평균 전력 단가를 kWh당 약 83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운영비와 예비비 등을 포함하더라도 10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전남광주전력공사를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 전남광주전력공사는 지역 재생에너지의 생산부터 거래까지 전담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분산 에너지 특구를 활용해 기업에 값싼 RE100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고속도로’도 놓겠다. 값싸고 품질 좋은 전력을 기반으로 첨단 산업과 대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활용방안에 대해 듣고 싶다.

△20조원은 단순한 소비성 예산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바꿀 성장 자펀드이다.

재정 운용의 핵심은 예산을 자본으로 전환해 투자 규모를 크게 키우는 레버리지 전략이다. 과거처럼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2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통합특별시가 1조원을 선제 투자하고 나머지 19조원은 기업과 민간 자본을 끌어오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20조원을 20개 프로젝트에 나눠 투입한다면, 총 300조원 이상의 거대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80%는 시민의 ‘생애 소득’으로 환원하겠다.

전남광주를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도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경제 기반권 도시’로 만들겠다.

-균형 발전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하나의 중심도시에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동부·서부·중부·광주 권역이 역할을 나누고 성과를 순환시키는 구조로 설계하겠다.

먼저 동부권은 여수·광양 국가산단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제조 전환과 수출 산업이 결합된 대한민국 남부권 신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 이를 위해 ‘국토 남부권 신산업수도개발청’을 설치해 우주항공, 첨단 제조, 미래 소재 산업 등 국가 신산업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산업 전환을 총괄하도록 하겠다.

서부권은 목포·신안·영광을 중심으로 한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기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수도이자 글로벌 관문 산업단지로 발전시키겠다. 전남광주에너지산업공사를 설립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저장, 거래를 통합 관리하고 데이터센터

와 AI·클라우드 산업이 결합된 에너지 기반 데이터 산업 거점을 구축하겠다.

중부권은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농생명·바이오 산업과 치유 산업이 결합된 친환경 생활경제 권으로 육성, 농촌 지역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산되도록 하겠다.

광주권은 AI와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표 AI 실증 전도도시이자 스마트시티로 발전시키겠다. 국가 인공지능 혁신진흥원과 AI데이터청을 유치해 산업과 행정, 도시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미래 도시 모델을 구현하겠다.

제조·에너지·녹색·문화가 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그 성장의 성과가 시민의 삶으로 돌아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만들겠다.

-통합특별시의 행정 중심지와 청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그동안 통합특별시 청사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3개 권역 분산형 청사 체계를 기본 구상으로 제시해 왔다.

특별시장이 된다면 전남 동부권·무안·광주 세 곳에 청사를 두고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

‘권역별 책임 부시장’ 체계도 도입, 각 권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

중요한 것은 ‘시민 주권’의 원칙이다.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해보고 시민들이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치구에서 재정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히 규모가 커진 광역단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자치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통합특별시는 각 시·군·구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분권형 특별시가 돼야 한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재정 권한을 27개 시·군·구로 이양해 지역이 재정 자율권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또 통합과 동시에 특별시 균형발전기금을 설치하겠다. 특별시 일반회계의 일정 비율을 자동 적립하고, 개발비의 일부 무부 전입,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매칭 연계 등으로 조성하겠다.

이 기금은 오직 전남 시·군 지역의 산업기반·정주여건·일자리 확충에만 사용하도록 목적을 명확히 하겠다. 인구감소지역, 섬 지역, 농산어촌 산업전환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구조로 설계하겠다.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전남과 광주에 지금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시키는 역사적 전환의 순간이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통합을 만들겠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도시, 시민의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도시를 차분하지만 단단하게 준비하겠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이 길에 시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민형배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민형배 의원이 지역별 경청투어를 통해 목표를 방문, 시민들에게 통합특별시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이 광양5일 시장을 찾아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